

# 공신력 보장 CBDC… 신원확인 필요없는 스테이블코인

##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 ② 한은 CBDC vs 스테이블코인

#. 요즘 김모 씨는 OO페이 이용이 늘었다. 더치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모두 OO페이 하다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OO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이나 매달내는 월세는 꼭 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낸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록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자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가능성성이 빨라진 시기에 과연 CBDC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다.

#### ◆ CBDC, 개인정보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민간기업인지 중앙은행인지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Chat GPT가 생성한 CBDC와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한은 발행 CBDC, 원화기반 안정적 해외송금 때 시간 단축, 수수료 줄여

민간기업 발행·관리 스테이블코인 신원확인 없이 개인지갑으로 송금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가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 가치를 끌어 올

린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CBDC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금액을 송금할 때 동일한 CBDC를 사용하면 거래 대금의 송금 시간과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CBDC는 한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금흐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금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얼마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및 부양 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 ◆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 되면 CBDC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지만 달러, 금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도.

또 CBDC는 신원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유통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B의 지갑으로 보낼 경우 지갑 주소 A에서 특정한 지갑 주소 B로 송금됐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의 소유주인 A와 B의 신원 정보는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OO페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기능에 맞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성능저하 논란…’서 계속

## “스테이블코인, CBDC·은행·비은행 3축으로 공존 가능”

디스프레드, 디지털 통화 공존전략  
중앙은행, 거시경제 관리 등 역할  
은행발행, 제도권 금융 디지털전환  
비은행, 웹3.0서비스 혁신 지원



Chat GPT가 생성한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공결제 인프라의 신뢰를 유지하고,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며,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소매 경제 및 웹3.0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은행 및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초읽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금융 환경 내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병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웹 3.0(탈중앙화 웹 기술) 컨설팅 기업인 디스프레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 코인,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은행 스테이블 코인·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등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 상호 보완적 관계로 공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

베이스가 발행하는 ‘USDC’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거래와 개인 간 송금이 자유로워 확장성과 유동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아 제도권의 수용 정도는 낮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도 지난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보다 신뢰도가 높다. 확장성은 다소 제한되지만, 신뢰성을 기반으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행도 국내 주요 은행과 연계해 지난 3월부터 ‘한국형 디지털화폐’의 시범 운행(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다. 원화 가치에 연동된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지만,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 반면에 각 은행의 예금을 토대로 전환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해 개방성은 크게 낮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의 사례를 들어 “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도매형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효율적인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법적 지위·국가 간 정산의 중립성 확보와 같은 공공적 기능 수행 능력을 위해 CBDC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해외 사용을 금지해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확산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와 비교했을 때 정책적 통제 권한에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일종의 ‘통화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얼 디스프레드 전략 실장은 “한국은 통화주권, 외환관리, 금융감독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강력한 국가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유동성은 기존 통화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기술 중심 설계가 아니라, 제도권 수용을 전제로 한 정책적·기술적 조건을 병행 설계하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잔고 300조 돌파

금투협, 5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전월 말 대비 10.9조 증가한 규모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

가 300조원을 넘어서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3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2조5000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전월 대비 46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를 포함한 5월 장외 채권 거래량은 417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4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량은 22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5월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27조5000억원 감소한 75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발행 잔액은 2930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회사채는 전월 대비 6조 4000억원 감소한 7조1000억원 발행됐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등급과 BB- 등급에서 모두 소폭 감소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30건, 2조285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0억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 금액은 11조 36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9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른 참여율(수요예측 참여 금액/수요예측 금액)은 497.2%로, 전년 동월 대비 13.4%포인트 증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민 기자 hyem@